

기본사회와 혁신경제

– 정치교체와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이진복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2024. 10.

기본사회와 혁신경제

- 정치교체와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이진복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요약	i
1. 기본사회와 경제 패러다임 전환	1
2. 구좌파의 수요측면 경제 패러다임	13
3. 신우파의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	15
4. 신주류의 혁신 경제 패러다임	21
5. 경제 패러다임 비교	28

요 약

1. 기본사회와 경제 패러다임 전환

○ 기본사회

- 기본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 삶을 보장. 혁신역량 강화, 혁신성장 중심의 국가 재도약 실현
- 민주당은 기본사회와 혁신성장의 선순환 실현,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선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체화한 신주류 형성을 통해 지속되는 정치 재편성(political realignment)

○ 경제 패러다임 전환

- 대공황 이후 구좌파의 수요측면 케인즈주의가 2차 산업혁명 주도. 3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신우파 주도 공급측면 신자유주의 득세
-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뉴노멀 담론 타파.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혁신경제학(Innovation Economics) 출현, 혁신에 저항하는 좌우의 포퓰리즘에 대항하여 신주류 형성

2. 경제 패러다임의 기본원칙

○ 구좌파의 수요측면 경제 패러다임

- 수요가 경제성장을 주도
- 부의 균등한 재분배가 중요
- 단기적 경기주기 관리가 주요 목표

○ 신우파의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

-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을 주도
- 할당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최대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
- 시장과 가격이 초점
- 경제는 균형경향
- 개인과 기업은 합리적 이익을 최대화하고 인센티브에 반응

○ 신주류의 혁신 경제 패러다임

- 혁신이 경제성장을 주도
- 생산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과 적응 효율성(adaptive efficiency)의 최대화가 경제성장
- 제도의 진화와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성장의 핵심
- 4차 산업혁명은 균형보다 변동 경향
- 개인과 기업은 합리적 이익 최대 추구자가 아님
- 스마트 민관 파트너십(smart public-private partnership)이 최선의 정책집행 방법

3. 경제 패러다임 비교

○ 수요측면 구좌파

- 수요측면 구좌파는 경기주기 관리를 목적으로 수요측면 증시, 정부주도 경기부양을 통한 소비 진작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간주
- 지속적인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稅後 소득 재분배와 정부지출의 양을 늘리는 큰 정부 강조. 구좌파의 슬로건은 ‘지출이 중요하다.’

○ 공급측면 신우파

- 공급측면 신우파는 부를 늘리는 공급측면 증시. 민간주도 투자를 위한 자본축적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간주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稅前 자산 재분배를 신성시. 문제는 정부실패. 작은 정부 강조. 신우파의 슬로건은 ‘감세가 중요하다.’

○ 혁신경제 신주류

- 혁신경제 신주류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실용적 병행. 수요와 공급의 양측면 혁신을 통한 성장에 초점
- 정부와 시장의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스마트 민관 파트너십 강조. 민간주도 정부촉진 혁신. 신주류의 슬로건은 ‘혁신이 중요하다.’

기본사회와 혁신경제

- 정치교체와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이진복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1 기본사회와 경제 패러다임 전환

○ 기본사회

-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사회
 - 기본사회는 고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경제체제의 존속을 위해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 보장

○ 기본사회의 정의

-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 “고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경제체제는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서도,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문, 2024.7.10.)

- 노동소득 중심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복지사회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음

○ 복지사회를 넘어

-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얼마든지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이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2023.6.19.)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본사회의 안정성은 혁신친화 유연성과 결합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 flexible security) 보장
 - 노동소득을 보장하는 평생직장이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 고용가능성과 활동가능성을 높이는 기본역량 활성화(activation)
 - 혁신친화적인 유연안정성 모델 벤치마킹. “노동자는 신기술이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낡은 기술이다.”

○ 기본사회의 유연안정성 모델¹⁾

-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자신의 일자리를 모두 잃을 위험. 유연안정성의 기본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기업이 특정 일자리를 없애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혁신을 함께 추진하거나 거부감이 없음
- 유연안정성의 기본사회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 노동자의 지속적인 적응성과 고용가능성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평생학습 전략
 - 모든 사람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실업기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적절한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고용을 장려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을 촉진하는 현대화된 사회보장 시스템

-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 ‘혁신도전’
 - 질문 능력이 더 중요한 AI 시대에 기본사회는 단순한 소득보장을 넘어 혁신역량 강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뒷받침

○ 혁신도전 기본사회

-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2022.9.28.)

1) Robert D. Atkinson, Stephen J. Ezell. *Innovation Economics: The Race for Global Advantage*(Yale University Press, 2012)

- “혁신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 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과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복잡한 수식이나 전문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 답합니다. 더 이상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 “정답이 있는 연습문제만 풀어난 우리 사회가 AI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문, 2024.7.10.)

- 혁신도전 기본사회는 민주당 강령에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명시된 ‘혁신성장 중심의 국가 재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
 -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대전환의 시대적 위기이자 도전으로 명시
 -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국가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정책목표로 제시

- **혁신성장**
-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 국제적 대립 심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우리나라에 위기이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국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모든 사람의 평화롭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 “우리는 우리의 꿈과 가치를 위해 13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하나,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한다.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민주화를 완성하여 모든 사람이 성장의 결과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 2024.8.)

- 어떤 기업이라도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 혁신성장과 누구나 가장 질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누리는 민주적 시장경제가 융합되는 기본사회
 - 중소기업 대 대기업의 제도적 벽에서 벗어나 울창한 수풀 같은 중소기업군의 활동기반과 하늘을 찌르는 거목같은 대기업의 활동공간이 동시에 보장되는 혁신 중심의 국가 재도약 지향
 - 패자부활이 가능하면서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스타트업 천국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이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드는 ‘전반적 상향이동 산업전략’(general upward-mobility industrial strategy) 추구

- 취약집단을 보호하는 안전망과 함께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부자로, 부자가 세계적 갑부가 되는 계층상승 사다리 복원, 슈퍼스타로 도약하는 스프링보드의 기회 창출
- 혁신성장 기본사회는 '퍼주기' 복지의 재탕이 아니라 재정부담은 같지만 더 효율적인 제도
 - 불필요한 뭉은 회수하고, 이미 시행되는 제도를 부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넘어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기본서비스

○ 더 효율적인 기본사회

-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뭉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2022.9.28.)
-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2023.6.19.)

-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을 넘어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기본서비스를 포함하는 '전국민 기본정산'으로 제도화 가능
 - '전국민 기본정산' 제도의 기본사회는 '불필요한 뭉을 회수'하는 현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월말정산으로 확대하는 下厚上薄 시스템
 - 기본소득만이 아니라 기본서비스로 확장, 정부의 모든 서비스(현금·현물 급여)를 통합하는 기본카드, 기본앱, 기본AI챗봇, 기본플랫폼으로 네트워크화
 - 수요축진을 위한 시효있는 기본화폐, QR코드 기본페이를 넘어 AI 네트워크를 축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6G와 블록체인 기반 코인 도입
- 기본사회 제도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생태계 구축. 선진국에 이어 선도국, 세계최초 AI 기본사회 실현
 - DJ의 3차 산업혁명의 지식기반경제 실현, 국가선도 정보고속도로, 인터넷 구축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4차산업혁명 선도 AI 기본사회
 - 빅데이터 딥러닝, 선제적 맞춤 서비스, 신수요 창출 알고리즘 기반 데이터덤,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 데이터는 21세기 디지털 원유, 미국,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3대 기축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보유 데이터 산유국
- 세계 최초로 정부를 전국민 기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대전환, 돈 쓰는 정부가 아니라 돈 버는 AI선도 정부 실현

○ 4차 산업혁명²⁾

-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 없이 기본사회는 공허.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성 혁명 없이 지속가능한 기본사회는 불가능
- 기본사회와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의 선순환. 기본사회는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성장은 기본사회의 지속가능 보장

(표 1) 산업혁명의 시대구분

산업혁명	발생 시기	특징
1차 산업혁명	1760~1840년대	증기력기반 기계화
2차 산업혁명	19세기 말 20세기 초	전기기반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	1960년대	전자·정보기술기반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21세기의 시작	기하급수 기술의 융합혁신

- 산업혁명은 자연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생산방식의 혁명. 기술 패러다임의 변동에 따라 1차에서 4차까지 이어지는 연속 생산력 혁명
- 일련의 새로운 산업혁명은 경제의 구조, 기능, 규칙을 변형시키는 신경제(New Economy)의 혁신 추동. 신경제는 새로운 기술 시스템만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시장, 새로운 노동과 비즈니스 조직, 새로운 노동력의 결합으로 혁신을 상호강화
- 통상적으로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1760~1840년대 발생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철도의 대중적 확산을 바탕으로 한 기계화 생산
- 19세기 말에 개시되고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일관생산조립라인에 기반한 소품종 대량생산, 테일러·포드주의
- 3차 산업혁명의 맹아는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년대), 개인용 컴퓨터(1970년대와 1980년대). 이후 인터넷(1990년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본격화. 1990년대 ‘디지털 혁명’ 또는 ‘정보화 혁명’의 기술 혁신을 통한 지식기반경제

2)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송경진 옮김, 새로운 현재, 2016).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Foreign Affairs, 2015). Robert D. Atkinson, Andrew S. McKay. "Digital Prosperity: Understanding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007). Cleverism. "Industrial 4.0: Definition, Design Principles, Challenges and the Future of Employment"(2017. 1. 16)

-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출현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위시한 무한 컴퓨팅, 센서와 네트워크, 3D 프린팅, 로봇공학, 합성생물학 등 기하급수 기술(exponential technology)의 융합혁신(combinatorial innovation)에 기반한 맞춤형 유연 대량생산(customized and flexible mass production)
-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패배주의적 ‘뉴노멀’ 담론을 타파하고 도전자 정신 부활, 혁신성장 중심의 국가 재도약을 이루려는 ‘뉴챌린지’ 담론
 - 컴퓨팅 성능이 2년마다 2배 향상된다는 인텔 창립자 ‘무어의 법칙’이 3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 속도를 상징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 연산능력이 10년동안 1000배 향상된다는 엔비디아 ‘젠슨 황의 법칙’ 작동
 - 젠슨 황의 법칙은 연평균 2.15배로 기하급수적 발전 의미. 기하급수 기술의 발전은 이미 특이점을 넘어선 상태. 실제로 챗 GPT의 능력은 지난 3년간 1000배 이상 발전
 -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의 6D’, 디지털화(Digitalization), 잠복기(Deception), 파괴적 혁신(Disruption), 무료화(Demonetization), 소멸화(Dematerialization), 대중화(Democratization)의 역동적 혁신 과정을 통해 기하급수 기업이 산술급수 기업을 창조적으로 파괴

○ ‘기하급수의 6D’³⁾

- 물리적 형태였던 제품 또는 프로세스가 디지털 형태로 바뀌기만 해도 기하급수적인 성장 잠재력. 아이디어를 빛의 속도로 전파하고 무료로 복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디지털화’
-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신기하지만 사소한 것으로 보이면서 꾸준히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잠복기’
-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모든 혁신.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파괴적 혁신’. 스스로 파괴적 혁신자가 되거나, 파괴당하거나 둘 중 하나
- 제품과 서비스에 지불하던 돈이 사라지는 현상. 돈을 가장 쉽게 벌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무료화’. 더욱이 무료화는 잠복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업계에서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비할 수 없음
- 제품과 서비스 자체가 사라지는 ‘소멸화’. 기능은 남아 있으나 물리적 실체가 점점 줄어들거나 사라져 융합됨. 가령, 이전의 고급 기술들이 소멸되어 일반 스마트폰의 기본 사양이 되었음
- 제품과 서비스가 무료화되고 소멸되면서 파괴적 혁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누구나 지불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화’

3) 피터 디아만디스, 스티븐 코틀러. 『볼드: 새로운 풍요의 시대가 온다』(이지연 옮김, 비즈니스북스, 2016)

-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AI 열풍’과 함께 빅테크 기업,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과 ‘AI 5(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가 글로벌 혁신 주도
- 3차 산업혁명이 단순 디지털화에 의한 ‘단순 정보화’라면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 기술의 융합혁신 활성화로 ‘지능형 정보화’ 실현
 - 단순 정보화의 사후대응·리액티브 방식에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자기인식, 자기최적화, 자기맞춤이 가능한 지능형 정보화의 실시간 및 사전대응·프로액티브 방식으로 기술 패러다임 전환
 - ‘AI 대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속도, 범위, 시스템 영향의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 구분. 선형적 변화에서 기하급수적 변화로 전체 시스템 변형, 경제적 파급효과를 넘어 전체 사회적 영향

○ AI 대전환

- 4차 산업혁명 본격화
 - 2016년 알파고 신드롬에 이어 본격적 체험형 時性比 AI
 - 2023년은 AI 상용화 원년, 내 손안에 생태계가 구축되는 제2 아이폰 모멘트, 딥러닝 AI가 시각지능을 갖게 되면서 안구 진화와 지각판 변동으로 인해 종의 다양성이 급격히 늘어난 캄브리아 대폭발에 비유
 - 이제 AI는 텍스트, 코드, 이미지, 동영상·3D·게임을 아우르는 멀티 모달, 페르소나를 가진 특화 에이전트 시대 개막, 인턴이자 파트너이자 멘토
 -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손쉽게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GPTs)와 마이AI를 거래하는 AI스토어
 - 조만간 모든 기기에 AI가 탑재되는 사물 인공지능 AIoT(AI of Things) 시대 도래

※ 3차 산업혁명인 지식기반경제는 인터넷에서 시작해서 모바일에서 완성(1991년 www, 1998년 구글, 2007년 아이폰)

(표 2) AI 혁명의 진화

	2020년 이전	2020년	2022년	2023년	2025년	2030년
텍스트	스팸검출 거래정보 기초적 질의응답	짧은 카피 초고	긴 문장 교정본 초안	전문 분야 특화 품질 향상(과학기술 논문 등)	일반인보다 나은 수준의 완성본	전문가보다 나은 수준의 완성본
코드	1줄 자동 완성	여러 줄 자동 생성	향상된 정확도로 긴 프로그램 코드 작성	다양한 언어 지원, 다양한 전문 분야에 적용	텍스트 지시로 상용 프로그램 초안 생성	텍스트 지시로 전문 개발자보다 나은 수준의 상용 프로그램 완성본 생성

	2020년 이전	2020년	2022년	2023년	2025년	2030년
이미지			미술 작품 로고 사진	실물 모형(제품 디자인, 건축 등)	최종 시제품 (제품 디자인, 건축 등)	전문 작가 수준의 최종 시제품(디자이너, 예술가, 사진가 등)
동영상 3D 게임			3D·동영상 분야 첫 시도	기초 수준의 3D·동영상 모델 파일	교정본 수준	인공지능 로블록스, 개인화된 비디오게임과 영화

자료: 이상은, 「AI 공존시대, AI 융합혁신」 2024.8.

- AI 군비경쟁

- “AI 군비경쟁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The AI Arms Race Is Changing Everything” (TIME 2023.2.17.)
- AI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존망기술. 4차 산업혁명 성패는 AI가 결정
- 기존 3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경제를 재편하는 글로벌 AI 승자독식 무한경쟁 시대, 천문학적인 자금투자를 하면서 미·중 패권경쟁 돌입, 한국, 영국, 캐나다 등이 3위 싸움
 - ※ 챗GPT 출시 두달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MAU) 1억명 돌파. MAU 1억명 도달에 유튜브가 2년10개월, 페이스북이 3년2개월 걸림
 - ※ 중국은 2017년 7월, 강력한 민관협력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AI최강국 목표 ‘AI 2030전략’ 채택. 2023년 7월 “중국 칭화대 챗GPT4 넘어선 AI챗봇, ‘챗GLM-6B’와 ‘챗GLM2-6B’ 무료배포”, 2023년 10월 “엔비디아보다 3000배 빠른 AI반도체 개발 성공 네이처 논문 발표”
- AI 냉전 승리는 반도체 하드파워와 데이터 소프트파워를 융합한 스마트파워가 결정
- 미국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 80% 장악, 미·중·한 새로운 AI반도체 개발 주력
- 미·중·한 글로벌 P3 시대 선도, 데이터 생산 기축플랫폼 보유국
 - ※ 미국은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테무 등, 대한민국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 초거대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AI 플랫폼

-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챗GPT’,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니(Gemini)’, 메타의 오픈소스 AI ‘라마(LLaMA) 등
- “중국에만 LLM 238개 등장”. 바이두 어니봇(Ernie Bot), 텐센트 LLM 훈위안, 알리바바 Qwen-7B-Chat 등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카카오 코지피티(KoGPT), KT 초거대 AI 믿음, 삼성 AI 가우스(Gauss) 등

- AI 창작·스타트업 생태계

- 직장을 넘어 직업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초거대 언어모델 연결 클라우드, AI어플, AI챗 서비스(엔터, 컨설팅, 카피, 음악, 그림, 교육, 프로필 등) 활성화

- 보안유지, 맞춤형 최적화 미세조정(fine-tuning) 확장기능 온디바이스, 소형 언어모델(small LLM) AI의 무한증식으로 경제 생태계 빅뱅

○ 정치교체⁴⁾

-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지향. 기본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정치교체
 -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은 민주당의 책임

○ 민주당의 책임

-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
-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문, 2024.7.10.)

- 정치교체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떠오르는 유권자(rising electorate)를 중심으로 신주류 형성, 주류교체를 통해 완성
 - 세대교체 +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정치교체. 정치교체는 새로운 경제 웨이브를 주도하는 세대의 등장, 신주류 형성을 통해 30년 이상 지속되는 ‘정치 재편성(political realignment)’으로 나타남
 - 정치 재편성은 생애주기에 기초한 연령효과(age effect)가 아니라 전체 사회에 대충격을 주는 지각변형 사건의 경험을 공유, 나이가 들어도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년배 효과(cohort effect), 세대효과가 필요조건
 - 정치 재편성의 충분조건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반영, 주도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체화한 중심정당의 연속집권, 당연한 여당의 출현

4) James L. Sunquist. *Dynamics of the Party System: Alignment and Realignment of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Brookings Institution, 1983), Robert D. Atkinson. *The Past and Future of America's Economy: Long Waves of Innovation that Power Cycles of Growth*(Edward Elgar, 2005), Richard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Basic Books, 2019), 손진석, 홍준기.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플랜비디자인, 2023)

(표 3) 정치 재편성과 경제 패러다임

산업혁명	정치 재편성	경제 패러다임
1차 산업혁명	우파	공급측면 자유주의
2차 산업혁명	좌파	수요측면 케인즈주의
3차 산업혁명	신우파	공급측면 신자유주의
4차 산업혁명	신주류	혁신경제학

-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혁명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조응했을 때, 경제위기가 혁신이 기회로 대전환되고, 정치 재편성 완성
 -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한 경제 처방과 이론은 정치적으로도 대성공, 진취적 정치세력에 의해 새로운 어젠다로 흡수되고 세계관으로 확장, 당연시된 경제담론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정당을 정당화
 - 여야 주류가 명시적,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지배적 담론이 되어 경로의존적 패러다임 구축, 고정관념으로 보수화, 또 다시 오는 경제위기를 악화시키는 한계에 이를 때까지 지속
- 1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했던 공급측면 자유주의는 고전학파 경제학으로 공인될 정도로 우파주도 정치적 지배 완성
 - 1929년 경제 대공황의 파국적 위기와 이어진 세계대전은 자유방임 고전학파 종식
- 2차 산업혁명과 함께 좌파주도 수요측면 케인즈주의로 대체. 전후 구미의 복지국가 체제 확립, 1932년 루스벨트의 승리와 뉴딜연합의 지속은 이를 상징
 - 1973년 오일쇼크와 케인즈주의 처방이 악화시킬 뿐인 지속적 스태그플레이션은 좌파주도 케인즈주의 종식
- 3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1979년 영국의 대처, 1980년 미국의 레이건의 압승은 신우파 주도 공급측면 신자유주의의 득세를 상징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과 이어진 대침체(Great Recession)로 인한 저성장·저물가·저금리를 당연시하는 뉴노멀 지속
- 뉴노멀 돌파 담론으로 4차 산업혁명 담론 출현,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혁신경제학(Innovation Economics) 출현, 좌우의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신주류 형성
 - 혁신경제학의 대표 경제학자, 로머(Paul Romer)가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혁신경제학이 주류경제학으로 공인
 - 2019년 12월 터져 나온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은 언택트 라이프스타일 대중화 강제, AI혁명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표 4) 대한민국의 정치 재편성

산업혁명	지각변형 사건	정치 재편성
1·2차 산업혁명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쿠데타	산업화
3차 산업혁명	1987년 6월 항쟁, 1997년 IMF 외환위기	민주화
4차 산업혁명	2017년 촛불혁명 2020년 코로나 국난	선도화

- 대한민국 또한 30년 주기 정치 재편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산업혁명 완수. 파국적 위기를 리셋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대전환, 초과회복하면서 추격을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
-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4.19 혁명의 절규는 ‘잘살아보세’라는 국민적 에너지로 결집, 절대빈곤의 후진국 탈출
 - 5.16 쿠데타와 권위주의적인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초고속 개발도상의 중진국 성취
- ‘민주쟁취, 독재타도’의 6월 항쟁으로 민주화 쟁취, IMF 외환위기를 대한민국 관치경제 청산, 지식기반경제 실현의 기회로 대전환
 - 민주당은 민주화 정당일 뿐 아니라 정보화 정당.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빠르게 추진, 3차 산업혁명 선도, 중진국의 함정을 돌파하고 선진국 실현
- ‘이제 나라냐는 촛불혁명의 빅 퀘스천에 ‘나라다운 나라’로 응답,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구좌파의 수요측면 경제 패러다임과 신우파의 공급측면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혁신 경제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대한민국을 선도국으로 만드는 신주류 형성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개발도상국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과 기성 선진국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을 융합한 패스트 무버(fast mover), 선도화 전략
 - 선진국도 다 같은 선진국이 아님.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미국과 실패한 유럽, 일본 간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존재
 - 미국과 유럽연합의 1인당 GDP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비슷.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계속 성장, 일본은 물론, 유럽연합 또한 정체. 현재 미국의 1인당 GDP가 2배 더 많음
 -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지능형 정보화를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선도국이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우려

- 기본사회와 혁신성장의 선순환이 국민의 성공과 기업의 성취로 선순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민주당의 국가비전,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 추구
 - 민주당의 꿈, 행복국가는 ‘신문명 시대’를 맞아 온 국민의 꿈, 더불어 잘 사는 초일류 국가 실현, 혁신 경제 패러다임에 기초한 ‘K-시대’ 선도
 - ‘K-시대’는 추격하는 개발도상의 ‘중진국(developing nation)’과 추월한 이미 발전된 ‘선진국(developed nation)’을 넘어 글로벌 초격차와 모범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재설정하는 ‘선도국가(leading nation)’ 비전

○ 기본원칙

- 수요주도 경제성장, 균등한 재분배, 단기적 경기주기 관리는 케인즈주의 수요측면 경제 패러다임의 세 가지 기본 원칙

① 수요주도 경제성장

- ‘수요가 경제성장을 주도한다.’
- 수요주도 경제성장은 케인즈주의의 알파와 오메가
 - 케인즈주의는 투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신케인즈주의(Neo-Keynesianism)로 업그레이드. 그러나 소비자의 수요가 투자를 촉진한다고 주장, 다시 수요를 경제성장의 제1 원인으로 고수
 - 신케인즈주의는 수요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리에서 매개변수로 투자를 설정. 수요가 기업가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
- 정부의 핵심적 경제정책은 수요를 촉진하는 재정정책. 따라서 경제정책은 사회정책으로 귀결
 - 총수요는 정부의 재정지출로부터 촉발. 정부의 핵심역할은 소비자의 수요 활성화

② 균등한 재분배

- ‘부의 균등한 재분배가 중요하다.’
- 지속적인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
 - 소비자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수 부자보다 다수 저소득층의 지출을 늘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중요
- 케인즈주의의 가장 중요한 경제이슈는 누가 이익을 얻는가의 문제. 이익갈등 문제를 전면화

5) Robert D. Atkinson, David Audretsch. “Economic Doctrines and Policy Differences: Has the Washington Policy Debate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s?”(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008), Robert D. Atkinson, David Audretsch. “Economic Doctrines and Innovation Policy”(Innovations: Technology, Governance, Globalization, Winter 2010) Robert D. Atkinson. “Social Justice and Innovation Economics”(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010).

- 생산성과 성장률을 입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총수요를 촉진하는 균등한 재분배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
-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혁신을 촉진하는 조세 정책, 가령 투자촉진 세액공제 등을 시행할 이유가 없음

③ 단기적 경기주기 관리

- '단기적 경기주기 관리가 주요 목표다.'
- 케인즈주의는 대공황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장기적 경제성장보다 단기적 경기주기 관리에 초점
-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수요창출을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 재정정책 강조, 생산성 향상 혁신정책 외면
 - 문제는 케인즈주의자는 조금만 경제상황이 나빠도 침체로 간주하는 비관적 경향. 그래서 장기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나 혁신촉진 투자 대신 단기적 경기부양 재정지출 선호

○ 강점

- 혁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경제정책의 기본
 -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는 사회시스템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불가능
 - 공정한 재분배는 경제성장의 전제. 경제 양극화가 크면 클수록 경제성장이 낮아지는 경향
- 고용 관련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 요인이 중요하다는 케인즈주의의 통찰은 유효
 - 고용률이 높을수록 생산성 향상 혁신촉진. 고용상승과 임금상승의 선순환은 비용절감을 위한 혁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는 생산성 향상과 선순환

○ 결점

- 수요측면 경제 패러다임에 내재하는 케인즈주의의 근본적 결점은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진짜 요인에 대한 무관심
- 소비자의 수요를 촉진하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경제의 양적 팽창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질적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생산성 향상에는 한계
 - 생산성 향상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 중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없이는 지속가능한 임금 상승 불가능

○ 기본원칙

- 신우파의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은 자본축적 주도 경제성장, 할당 효율성 최대화, 시장가격 우선, 균형경향 경제, 이익 최대 추구자라는 고전학파 경제학의 기본 원칙 고수

① 자본축적 주도 경제성장

-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을 주도한다.’
- 자본축적 주도 경제성장은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의 가장 중요한 원칙
 - 자본축적을 위한 저축 중시. 저축을 많이 할수록 자본이 형성되고, 자본투자를 통해 경제성장 촉진
-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은 자본투자만을 성장의 유일한 동력으로 간주하는 ‘자본 근본주의(capital fundamentalism)’
 - 기술혁신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최소화.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에서 기술혁신은 설명되지 않는 잔여적 변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외재적 요소

② 할당 효율성 최대화

- ‘할당 효율성 최대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한다.’
-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에서 효율성은 할당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 할당 효율적 시장은 희소 재화와 서비스의 할당이 잘 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가격에 근거해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장
- 할당 효율성 최대화는 자유방임. 할당 효율성을 왜곡하는 인위적 정책은 경제에 유해
 -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선택,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가격이 결정되어 생산된 요소, 즉 자본, 노동, 재화와 서비스의 ‘자연적’ 할당을 변경하려고 개입하는 정책
- 할당 효율성 최대화 원칙의 위반은 사중손실(deadweight loss) 야기
 -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최적가격 파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효율성 상실, 모두가 손해

6) Robert D. Atkinson, David Audretsch. “Economic Doctrines and Policy Differences: Has the Washington Policy Debate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s?”(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008), Robert D. Atkinson, David Audretsch. “Economic Doctrines and Innovation Policy”(Innovations: Technology, Governance, Globalization, Winter 2010)

- 세금은 본성상 할당 효율성을 왜곡한다고 주장. 특정 활동을 우대하거나 부담을 주는 세금은 훨씬 더 왜곡
- 가장 이상적인 세법은 낮은 세율과 적은 왜곡. 이를 통해 세금이 아니라 시장이 경제 행위자의 선택 유도
- 동일한 논리로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적극적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부적합

③ 시장가격 우선

- ‘시장과 가격이 초점이다.’
- 경제학의 초점은 가격 신호가 결정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
 - 할당 효율성은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가격신호에 대한 경제 행위자의 계산적 반응으로 현상
 - 결과적으로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은 기업, 산업, 국가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아니라 수학적 모델
 - 가령, 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채택, 기업가정신의 문화적 영향 등과 같은 요소보다 이자율, 환율, 물가인상률 등의 통화 요소에 초점
-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은 모든 경제가 하나의 동일 원칙, 시장가격에 대한 반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가정
 - 경제사, 문화, 규범, 제도 등과 같은 요소를 무시하고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가격의 보편적 세계, 수학적 모델에 집착
 - 경제는 여전히 시장가격에 기초한 수요공급의 법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혁명의 등장, 4차 산업혁명의 출현을 부정

④ 균형경향 경제

- ‘경제는 균형경향이다.’
- 대규모 시장이 균형(equilibrium) 상태로 귀결되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상태이기 때문에 간섭해서는 안 됨
 - 시장가격이 경쟁을 통해 정해지면 균형 상태. 그 결과 구매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판매자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동일해짐
 - 시장의 균형경향을 가정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주요 임무는 소극적으로는 시장 균형을 파괴하는 인위적 개입 배제, 적극적으로는 인위적 칸막이 제거
 - 결국에는 시장의 자정능력으로 균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케인즈주의의 단기적인 경기주기 관리는 중장기적으로 할당 효율성 저하

⑤ 이익 최대 추구자

- ‘개인과 기업은 합리적 이익을 최대화하고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기주의자가 공익을 가져온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
 - 선의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 이기적 행위자는 자기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이 과정에서 공익 촉진
- 가장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세금. 특히 고소득자의 최고한계세율이 소득, 저축, 투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특징⁷⁾

- ① 세금이 중요하다(Taxes matter).
 - 전반적 경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보다 개인의 미시수준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더 중요
 -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세금. 특히, 최고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
- ② 금융자본(저축)의 공급이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다.
 - 번영의 핵심이 수요가 아니라 자본공급이라고 믿는 자본 근본주의자(capital fundamentalists). 고용보다 주식시장이 중요
 - 최저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최고세율을 낮춰야 자본공급 활성화. 중산층과 서민 감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가 중요
- ③ 조세 정책은 단순할수록 좋다.
 - 조세정책은 시장을 왜곡하는 특정 행동을 장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한 공제와 장려금을 가진 조세 시스템보다 단순한 것이 좋음
 - 우선 자본 투자의 양을 늘리는 부자 감세가 중요. 혁신을 촉진하는 자본의 질은 시장의 결과이기 때문에 방임
- ④ 경기주기는 자기 조정능력이 있다.
 - 수요를 걱정할 필요 없다.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스스로 수요 창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가 있을 때까지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됨
 - 가령, 과도한 실업이 있다면 고용될 때까지 임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됨. 따라서 경기주기 관리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음

7) Robert D. Atkinson. *Supply-Side Follies: Why Conservative Economics Fails, Liberal Economics Falters, and Innovation Economics is the Answer*(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6)

○ 강점

- 미시경제 수준에서 혁신을 확산하는 대전제는 시장경쟁이라는 강력한 통찰 제공
 - 과도한 세금이 혁신 인센티브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 문제는 어느 정도가 과도한 세금인지는 경험적 실증 필요

○ 결점

- 신우파의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적합
 - 신우파는 자본공급의 질이라는 산업혁명의 생산요소가 아니라 자본공급의 양이라는 시장의 거래요소에 집착했기 때문에 실패
 - 신우파는 구좌파와 동일하게 생산성이 아니라 재분배에 초점. 구좌파가 세후(after-tax) 소득의 재분배에 올인했다면, 신우파는 감세를 통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 세전(before-tax) 자산의 재분배에 올인
- 자본이 아니라 혁신이 경제성장에서 훨씬 큰 원동력
 - 4차 산업혁명의 신경제에서 핵심적 문제는 자본의 부족이 아니라 좋은 투자 기회 부족
 - 공급측면 감세는 자본 투자를 촉진하지 못함. 자본공급이 아니라 혁신창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 낮은 이자율이 반드시 자본투자를 촉진하지는 않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혁신적 투자 기회가 없다면 낮은 이자율은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투기, 특히 부동산 구입에 쓰일 것임
 - 전반적인 이자율 인하보다 가령, 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같은 특정목적 장려 세액공제가 혁신을 촉진하는데 효과적
 - 정부는 우선순위를 모르면서 지출을 줄이는 것에 능사인 최고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CFO)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미래의 혁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잘하는 최고혁신책임자(Chief Innovation Officer, CIO)가 되어야
- 생산 효율성과 적응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할당 효율성보다 경제성장에 훨씬 더 중요
 -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은 효율성을 시장에서 자원의 할당으로만 제한, 생산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과 적응 효율성(adaptive efficiency)을 간과했다는 치명적 결점

○ 효율성의 종류

-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의 효율성은 '할당 효율성'
 - 할당 효율성은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원이 할당되는 시장조건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의 효율성은 '생산 효율성'과 '적응 효율성'
 - 생산 효율성은 노동력을 포함, 가장 적은 투입으로 가장 많은 산출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조직의 능력
 - 적응 효율성은 일련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신기술 채택을 통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와 제도의 능력
- 할당 효율성을 왜곡하지만 생산 효율성과 적응 효율성을 향상하는 정책은 얼마든지 있고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 가령,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할당 비효율로 인한 손실보다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 혁신경제학의 토대는 성장의 대부분이 기존 재화와 서비스의 효율적인 할당이 아니라 생산 효율성과 적응 효율성 향상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
- 신우파는 세전(pretax) 시장이 효율적이고 세금, 규제, 정부지출의 보이는 손은 시장을 왜곡한다고 가정. 시장실패의 경우에도 정부개입은 잘못이라고 가정.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는 희박
-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의 할당 효율성은 완전경쟁, 규모에 따른 수확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외부효과(externalities) 부재를 가정.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정은 실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가정
- 신우파는 기존 희소자원의 할당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혁신에 무관심. 신고전학과 경제모델은 기업이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른 가격 변화에 반응하는 정태적 생산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가정
- “마차를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열차를 만들 수 없다.” 혁신은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도약.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은 양적 공급에 집착하면서 질적 도약에 무관심
-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은 최소정책으로 나타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 편안함 제공. 그러나 정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 경제정책이 혁신에 무관심하다면 결코 성장친화적이라 할 수 없음
- 경제는 하나의 균형경향을 갖고 있지 않음
 -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은 대규모 시장이 일반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 그러나 창조적 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혁신의 시대에 시장균형은 있을 수 없음
 - “균형 시스템은 정의 자체가 정지 상태인 반면, 성장은 변화와 역동성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의 내재적 본성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은 본성상 시장을 교란하는 창조적 파괴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단일 균형 상태를 가정하는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경제 시스템은 다중 균형(multiple equilibria), 나아가 항구적 변동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
- 글로벌 경제에서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동하는 신경제를 선점하는 국가가 비교우위 확보. 더 생산적인 균형을 향한 경제혁신을 이끄는 공공정책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
- 개인과 기업은 반드시 합리적 행위자가 아님
 - 합리적 경제 행위자 가정 없이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학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불가능. 경제 행위자는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
 - 행위자의 판단은 프레임 편향, 리스큰 판단 곤란, 미신적 사유, 기타 인간적 편향으로 수학적 계산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
 - 조직변동과 혁신과정 연구에 의하면 혁신과정이 경로의존, 장소특수, 제도형성에 의한 진화적 발전 과정이라는 것이 밝혀짐
- 신우파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경멸적 의미로 '산업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시장만능주의
 - 산업정책을 이미 망한 소련식 중앙계획경제로 치부.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주도적인 방식으로 공정경쟁을 확립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정책 부정

○ 기본원칙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신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여섯 개의 기본원칙 견지. 혁신주도 경제성장, 생산 효율성과 적응 효율성 최대화, 제도의 진화와 학습 촉진, 변동경향 경제, 불확실한 행위자, 스마트 민관 파트너십

① 혁신주도 경제성장

- ‘혁신이 경제성장을 주도한다.’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이 다른 경제 패러다임과 구별되는 최대 특징은 혁신주도 경제성장. 혁신을 경제활동 외부에서 일어나는 경제 모델의 외생적 요소로 간주하지 않음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모델링하려는 명시적 노력. 혁신을 정부를 포함한 경제행위자의 의도적 행위의 결과로 인식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원동력은 공급측면 신우파가 주장하는 자본축적이 아니라 혁신
 - 오늘날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자본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디에 투자되는지. 즉 절실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것이 경험적 증거

② 생산 효율성과 적응 효율성 최대화

- ‘생산 효율성과 적응 효율성의 최대화가 경제성장이다.’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 행위자가 더 생산적이고 혁신적이 되도록 촉진하는 것에 초점

○ 경제학 정의

- 신주류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생산 효율성과 적응 효율성 중시. 경제학을 “사회가 부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산, 생산물,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형식을 어떻게 창조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정의

8) Robert D. Atkinson, Stephen J. Ezell. *Innovation Economics: The Race for Global Advantage*(Yale University Press, 2012). Paul M. Romer.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90. 10.), Robert D. Atkinson, David Audretsch. “Economic Doctrines and Policy Differences: Has the Washington Policy Debate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s?”(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008), Robert D. Atkinson, David Audretsch. “Economic Doctrines and Innovation Policy”(Innovations: Technology, Governance, Globalization, Winter 2010)

- 구주류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은 할당 효율성 중시. 경제학을 “사회가 가치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희소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상이한 사람들 사이에 이를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정의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경제학은 희소자원이 분배 방식이 아니라 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창조 방식에 대한 연구
- 경제성장의 근본 척도는 할당 효율성이 아니라 생산 효율성과 적응 효율성
 - 정부 정책이 가격신호를 왜곡하고 경제에 사중손실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을 향상하는 혁신을 장려했다면 효율적
 - 시장실패가 상시적인 상황에서 혁신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
 - 혁신과 번영은 단독으로 활동하는 개별 기업의 활동이 아니라 민관 파트너십이 핵심적 역할. 강력한 연구 인프라, 숙련 노동자, 네트워크, 표준 등, 광범한 혁신 생태계의 진화적 산물

③ 제도의 진화와 학습 촉진

- ‘제도의 진화와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성장에 핵심이다.’
- 혁신 경제 패러다임에서 혁신은 행위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이라는 제도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진화적 과정

○ 국가혁신시스템⁹⁾

- 혁신이 과학기술 이상인 것처럼 국가혁신시스템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직접 관련된 요소 이상. 혁신은 실리곤벨리를 넘어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의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 국가혁신시스템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혁신의 창출, 확산, 활용을 촉진하는 민간·공공조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
- 국가혁신시스템은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정치·사회적 요소를 포함. 금융시스템, 민간 기업조직, 초·중·고등 교육시스템, 노동시장, 문화, 규제정책, 혁신제도 등을 포함
- 국가혁신시스템의 혁신성공 삼각형(innovation success triangle)은 혁신을 결정하는 요소. 첫째, 기업 환경, 둘째, 무역·조세·규제 환경, 셋째, 혁신정책 환경

9) Robert D. Atkinson. "Understanding the U.S. National Innovation System"(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020)

- 경제성장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결정적 원인은 문화, 역사, 규범, 법, 태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국가혁신시스템의 진화와 경제 행위자의 학습 정도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업가와 노동자,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의 상호작용과 학습을 통해서 혁신이 촉진된다고 생각
 - 따라서 경제정책의 초점은 기술혁신, 기업가정신, 더 높은 숙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생태계 창출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가격과 같은 거시경제만이 아니라 미시경제, 통화 이슈만이 아니라 제도 이슈로 초점 전환

○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에서 ‘혁신’

-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에서 혁신은 외생적 과정. 즉 알 수 없는 ‘블랙박스’
 - 혁신을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인식, 적극적 경제정책으로 촉진해야 하는 목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경기주기 관리에 집중하거나 할당효율성 최대화를 통해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언젠가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처럼 혁신을 간주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병행, 융합을 통한 혁신 강조
 - 수요공급의 법칙을 넘어 제도의 측면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신지식, 신숙련, 신자본의 수요와 함께 공급을 동시에 강조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의 완전히 다른 접근방식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패러다임과 완전히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질문을 제기
 - 기업가가 새로운 벤처를 시작할 리스크를 감당하는가?
 - 노동자는 숙련되어 있는가? 기업은 숙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있는가?
 - 기업은 기술적 돌파구에 투자하고 있는가? 정부는 기술적 베이스(가령, 연구재단, 과학자와 엔지니어 교육)를 지원하고 있는가?
 - 기업과 지원기관의 지역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고 있는가?
 -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이 지식을 기업과 개인에게 이전하고 있는가?
 - 무역정책이 국내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으면서 세계무대에서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가?
 - 정책입안자가 더 혁신적인 경쟁자로부터 기성 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가?

-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충분히 투자하고 상업화하는 올바른 인센티브와 도구를 갖고 있는가?
- 가장 중요하게, 정부정책이 첨단 정보기술의 보편적 채택과 사회와 경제의 광범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는가?

④ 변동경향 경제

- ‘4차 산업혁명은 균형보다 변동 경향이다.’
- 어떤 시기에 어떤 시장에서 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시장 균형은 잠깐(fleeting moment)
 - 새로운 기업의 진입, 교란적 기술혁신, 무역패턴의 변화 등, 창조적 파괴로 인해 시장은 결코 균형 상태에 있지 않음
- 혁신 경제 패러다임에서 변동경향 경제로 인한 시장 불균형은 경제적 비효율이 아니라 성장과 진보의 모멘텀
 - 모든 순간에 정태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은 지속적인 정태로 전도되어 정태적 비효율 야기. 혁신은 시장 불균형의 원인이자 결과, 시장 균형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진화 과정

⑤ 불확실한 행위자

- ‘개인과 기업은 합리적 이익 최대 추구가 아니다.’
- 혁신은 단순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른 가격신호에 배타적으로 반응하는 원자의 행동이 아니라 불확실한 행위자의 도전
 - 측정가능한 계산에 근거한 일관된 의사결정만으로는 혁신추구 불가능. 기존의 합리성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비합리적 행위가 혁신
 - 혁신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도전자 정신을 장려하는 제도적 생태계 중요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이데올로기로 경직된 법칙이 아니라 결과를 중시,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실천적 접근방식
 - 이런 이유에서 경제학만이 아니라 기술, 기업, 지역개발, 문화, 법학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마인드. 무엇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
 - 시장의 가격신호와 같이 모든 시기의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만고불변의 이론이라기보다 실용적 가이드라인 지향
 - 가령, 혁신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출 것, 변화와 역동성을 받아들일 것, 적절하게 시장경쟁을 지원할 것, 민관 파트너십을 촉진할 것 등

⑥ 스마트 민관 파트너십

- ‘스마트 민관 파트너십(smart public-private partnership)이 최선의 정책집행 방법이다.’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이슈에서 양자택일 반대
 - 효과적인 국가혁신시스템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결합을 추구
 - 기업, 비영리조직, 정부기관을 포함한 국가혁신시스템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할지는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 무엇이 공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사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를 결정하는 문제는 실질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로 뒷받침되어야
 - 국가혁신시스템을 가이드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시장실패와 국가실패를 동시에 방지하는 스마트 민관 파트너십
- 신우파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의 정부적대, “정부는 언제나 틀렸다”라거나 구좌파 수요측면 경제 패러다임의 기업적대, “기업이윤은 공익에 반한다”는 이데올로기는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신우파의 시장만능 이데올로기 거부. 경제 행위자는 가격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와 같은 합리적 이익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때때로 혁신에 역기능
 - 구좌파의 “대기업에게 좋은 것은 국가에 좋지 않다”는 대기업 적대 이데올로기 거부. 대기업이 혁신에 좋을지 나쁠지는 결과로 판단해야 하지만 국가의 글로벌 혁신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

○ 혁신경제학의 특징¹⁰⁾

- ① 우리의 집단적 번영은 창조적 파괴를 포용하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 구좌파는 리스크 없는 성장을 원함. 그러나 성장은 경쟁력 없는 기업, 산업, 직업을 청산하는 창조적 파괴 전제
 -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혁신과 싸우는 소수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혁신친화적인 진취적 자세 필요
 -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이기는 시대에 혁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입증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보수적 태도 거부
- ② 국제경쟁을 하는 기업이 따로 있지만 모든 국가는 국제경쟁을 한다.
 - 신우파는 기업은 경쟁하지만 국가는 경쟁하지 않는다고 그릇된 주장.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혁신시스템 부정

- 고부가가치 혁신기반기업은 국가경쟁력에 핵심.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국가는 더 이상 경제의 산업적, 부가가치적 구성에 무관심할 수 없음
 - 자유방임은 고부가가치 기술과 지식집약생산에서 국제경쟁력 상실 초래. 국가혁신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 필수
- ③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산업을 더 혁신적이고 생산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구분한다.
 - 기업의 혁신과 무관하게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것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분
 - 경쟁력 없는 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과 같은 정책
 - 경제의 혁신적, 생산적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부의 보조금을 없애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정부의 투자를 확대
- ④ 국민이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혁신의 야성(animal spirits)을 일깨우는 동시에 혁신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animal fears)을 잠재우는 기본사회 전제
 - 구좌파는 변화에 저항해서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고, 신우파는 변화를 이겨내라고 국민에게 말만함. 해법은 변화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국민이 변화의 결과에 대응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사회
 - 국민이 혁신을 포용하고 활용할 수 있으려면 언젠든 재기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평생 활동역량을 개발하고 상향이동 기회를 확대하는 기본사회 정책 필수
- ‘워싱턴 혁신합의’¹¹⁾
 - 공급측면 경제 패러다임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워싱턴 경제합의’를 대체하는 혁신 경제 패러다임에 기초한 새로운 ‘워싱턴 혁신합의(Washington Innovation Consensus)’의 기본 원칙
 -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힘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혁신기반 경쟁력에서 리더가 아니고 기업, 노동, 아카데미, 정부가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쇠퇴할 것임
 - 정부의 주요 경제적 역할은 기업, 정부, 비영리집단 등의 제도가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임
 - 재정준칙은 중요. 그러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한 자금지원은 줄여서서는 안 됨. 오히려 혁신정책에 대한 자금지원은 확대되어야 함
 - 세계화는 다른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규칙을 준수하고 미국이 혁신경쟁에서 레벨업을 할 때만 미국에 순수하게 좋음

- 혁신은 정책에 의해 장려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의도적 인간 행위의 산물
- 최선의 세법은 혁신과 경쟁력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
- 정부는 과학연구와 교육 등, 요소 조건을 지원해야. 그러나 정부 단독으로는 국가가 혁신활동의 첨단 위치를 차지하는데 충분하지 않음. 더 많은 역동적 혁신정책이 필요
- 정부는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일반적 산업과 광범한 기술영역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분명한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여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촉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승자를 뽑을 수 있고 뽑아야 됨

○ 강점

-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경제 패러다임을 계승한 신주류 경제 패러다임이자 이전 패러다임의 결점을 보완한 경제 패러다임의 혁신
 - 아인슈타인 물리학이 뉴턴 물리학의 토대 위에 수립된 것처럼 이전 경제 패러다임의 강점을 인정하면서 혁신을 강조하는 성장 모델 추구

○ 결점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이 혁신에 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입안자의 변명으로 사용된다면 실용적 정책 가이드 역할이 아니라 그릇된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 있음
-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건전한 거시경제와 안정적 기본사회라는 경제·사회적 펀더멘탈을 벗어날 수 없음
 - 공정경쟁 시장과 혁신지향 기본사회는 역동적 혁신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 혁신은 자유로운 거시 환경 하에서만 만발
 - 제도, 기업가, 기술에 기반한 혁신에 초점을 맞춘 혁신 경제 패러다임은 효과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시스템을 대체하지는 못함

10) Robert D. Atkinson. *Supply-Side Follies: Why Conservative Economics Fails, Liberal Economics Falters, and Innovation Economics is the Answer*(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6)
 11) Robert D. Atkinson, Stephen J. Ezell. *Innovation Economics: The Race for Global Advantage*(Yale University Press, 2012)

5 경제 패러다임 비교

○ 경제이론 쟁점 비교¹²⁾

(표 5) 경제 패러다임 쟁점 비교

	수요측면 구좌파	공급측면 신우파	혁신경제 신주류
경제이론	케인즈주의 경제학	고전학파 경제학	혁신경제학
경제성장 위치	수요측면	공급측면	수요·공급측면 병행
경제성장 동력	소비	자본축적	혁신
핵심 경제과정	소비자 수요, 완전고용	할당 효율성	생산 효율성, 적응 효율성
경제정책 핵심목적	세후 재분배	세전 재분배	생산성
정부 조직	큰 정부	작은 정부	스마트 민관 파트너십

- 케인즈의 이름을 딴 케인즈주의 경제학이 수요측면 구좌파의 경제이론
 -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바이블은 대공황의 원인과 해법을 체계화한 케인즈의 1936년 저작,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 오늘날 미국에서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주요 연구기관은 데모스(Demos), 경제정책연구원(Economic Policy Institute),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미국노총(AFL-CIO) 등
 - 수요측면 구좌파는 경기주기 관리를 목적으로 수요측면 중시, 정부주도 경기부양을 통한 소비 진작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간주
 - 소비자의 수요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 다시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과정 강조
 - 지속적인 소비자의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서 稅後 소득 재분배에 초점, 정부지출의 양을 늘리는 큰 정부 강조. 구좌파의 슬로건은 ‘지출이 중요하다.’
- 아담 스미스를 수호성인으로 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이 공급측면 신우파의 경제이론
 - 경제학의 주류이론, 고전학파 경제학의 바이블은 아담 스미스의 1776년 저서,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2) Robert D. Atkinson. “The New Growth Economics: How to Boost Living Standards through Technology, Skills, Innovation, and Competition”(The Blueprint, 2001. 2.), Robert D. Atkinson. “The Innovation Economy: A New Vision for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Progressive Policy Institute, 2003), Robert D. Atkinson. “Growth vs. Redistribution: The New Fault Line in U.S. Politics of Economic Policy”(The American Compass, 2020. 12.) Will Marshall. “The New Politics of Production: A Progressive High-Growth Strategy”, Progressive Politics After The Crash(I. B. Tauris, 2013)

- 미국에서 고전학과 경제학의 주요 연구기관은 미국기업연구원(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카토연구원(Cato Institute), 경쟁기업연구원(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등
- 공급측면 신우파는 부를 늘리는 공급측면 중시. 민간주도 투자를 위한 자본축적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간주
- 보이지 않는 손의 할당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稅前 자산 재분배를 신성시, 자유방임 시장의 경쟁 그 자체가 이상적 인센티브
- 문제는 정부실패, 규제철폐와 감세 강조. 경쟁을 파괴하고 독과점을 유발하는 작은 정부의 역설. 신우파의 슬로건은 ‘감세가 중요하다.’
- 슈페터(Joseph A. Schumpeter)를 태두로 하는 혁신경제학은 폴 로머가 체계화, 3차 산업혁명과 함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부상하는 신주류의 경제이론
 - 혁신경제학은 케인즈와 비슷한 시기에 저술했지만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슈페터의 1942년 저작,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에서 시작
 - 미국에서 혁신경제학의 대표 연구기관은 정보기술 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경제전략연구원(Economic Strategy Institute),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Center), 경쟁력회의(Council on Competitiveness) 등
 - 혁신경제 신주류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병행. 수요와 공급의 양측면 혁신을 통한 성장에 초점. 비용절감, 품질개선과 신수요 창출의 선순환 촉진
 - 문제는 창조적 파괴의 활성화, 생산의 질을 높이는 생산 효율성과 제도의 진화와 학습을 높이는 적응 효율성 최대화
 - 정부와 시장의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스마트 민관 파트너십 강조. 민간주도 정부추진 혁신. 신주류의 슬로건은 ‘혁신이 중요하다.’

○ 혁신경제학의 다양한 명칭

- 슈페터는 케인즈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지만 완전히 다른 접근방식으로 경제학 연구, 창조적 파괴를 경제의 기본적 추진력, 본질적인 사실로 인식
- “파악되어야 할 본질적인 점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다룰 때 우리는 진화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 “자본주의 엔진을 가동시키고 그 가동을 지속시키는 기본적 추진력은 자본주의기업이 창조하는 새로운 소비재, 새로운 생산방법 또는 새로운 운송방법, 새로운 시장들, 산업조직의 새로운 형태들에서 유래한다.”

- “부단히 옛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부단히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하는 산업상의 돌연변이의 동일한 과정을 예시한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 과정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사실이다.”¹³⁾
- 경제학의 신주류로 부상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다양한 각도에서 오늘날 산업혁명의 경제성장을 이론화,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
 - 혁신을 경제학의 핵심 주제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혁신경제학’
 - 혁신을 경제활동 외부에서 일어나는 경제의 외생적 요소가 아닌 내생적 요소로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 생산요소의 할당 효율성에 입각한 성장을 추구하는 공급측면 자칭 성장 경제학을 넓은 모델로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신성장 경제학(new growth economics)’
 - 합리적 경제 행위자의 수학적 모델에 입각한 기성 경제학을 비판하며 탄생한 제도 경제학 업그레이드, 제도의 진화와 학습을 중시하고 국가혁신시스템의 총체적 제도를 핵심 연구주제로 하는 ‘신제도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 제도를 생태계로 간주, 혁신을 생산 효율성과 적응 효율성의 진화 과정으로 고찰하는 ‘진화 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
 - 창조적 파괴를 강조하는 쉘페터의 이론을 계승, 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신쉘페터 경제학(neo-Schumpeterian economics)’ 등

○ 경제정책 쟁점 비교¹⁴⁾

① 조세·지출 정책

- 정부의 조세·지출 정책에서 수요측면 구조파는 과도한 세금과 지출(overtax and spend) 정책 기조
 - 소비활성화 경기부양이 경제성장을 이끌기 때문에 정부지출을 늘리는 높은 세금, 특히 부자에 대한 높은 세금은 필수
 - 소수 부자의 소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13) 조지프 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변상진 옮김, 한길그레이트북스, 2023)

14) Paul M. Romer. “Beyond Classical and Keynesian Macroeconomic Policy”(Policy Options, 1994.), Robert D. Atkinson. Innovation Nation: Neo-Classical Economics is Bunk. Keynes is Dead. What Comes Next?(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009), Robert D. Atkinson, David Audretsch. “Economic Doctrines and Policy Differences: Has the Washington Policy Debate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s?”(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008), Robert D. Atkinson, David Audretsch. “Economic Doctrines and Innovation Policy”(Innovations: Technology, Governance, Globalization, Winter 2010), Robert D. Atkinson. “Social Justice and Innovation Economics”(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010)

- 진작, 수요를 창출하는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는 필수
- 지출과 투자를 구분하지 않음. 수익창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부지출의 양을 진보의 척도로 간주
- 공급측면 신우파는 차입과 지출(borrow and spend) 정책 기조
 - 감세, 특히 과도한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는 차입과 동시에 지출 최소화
 - 세금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 왜곡. 특히 차별적 과세와 최고한계세율이 높은 세금은 시장 왜곡 심화. 일반적 부자 감세 필요
 - 정부지출은 본성상 비효율. 따라서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필수 영역, 가령 국방과 치안 등으로 제한
- 혁신경제 신주류는 감세와 투자(cut and investment) 정책 기조
 - 예산과 지출의 양이 아니라 구조 개혁 추진. 정부의 지출과 투자를 구분.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수익성 투자를 늘리는 투자우선 예산
 - 혁신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 세액공제, 숙련교육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의 감세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적극 활용
 - 정부의 경상비 지출, 경쟁력 없는 부문에 대한 보조금은 되도록 줄이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선도적 정부 투자 확대

② 규제·반독점 정책

- 수요측면 구조파는 생산자, 특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반독점 집행을 옹호
 - 독과점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극단화, 대기업 적대경향. 반독점 조치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적 방파제로 신성시
 - 혁신역량과 상관없이 약자보호에 초점, 국가경쟁력과 상관없이 기업의 규모에 집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칸막이를 공고화하는 규제강화
- 공급측면 신우파는 할당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자유방임 시장 이상화. 시장질서를 지켜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부의 능력과 역할에 회의적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정작용으로 시장이 초래한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 정부의 반독점 집행에 반대하는 경향
 - 규제는 시장의 가격신호 왜곡, 시장질서를 해체하는 규제완화로 인해 출현하는 독과점의 폐해를 보이지 않는 손의 결과로 용인, 결국 시장경쟁 자체를 무력화
- 혁신경제 신주류는 기업의 시장지배력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생산성과 혁신에 초점
 - 구조파와 신우파가 기업의 규모에 집착한다면 신주류는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실용적 경향
 -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양자택일을 넘어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창조적 파괴를 가속화하는 규제혁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높이는 구조개혁 추진

- 갑을이 아니라 문제는 불공정한 '질'. 갑질과 을질 간의 남 탓 경제를 넘어 '질'의 반칙 경제 청산. 혁신으로 갑을 상생 생태계 조성

③ 경기부양·혁신 정책

- 수요측면 구좌파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큰 정부가 혁신보다 우선. 수요창출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경제정책의 알파와 오메가
 - 최선의 경기부양 패키지는 정부지출의 양을 늘리는 것, 특히 저소득층의 수요를 늘리는 복지 프로그램 자체가 경제정책이라고 주장
 - 주요 관심사가 경제적 약자 보호이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혁신정책에 부정적. 구좌파의 혁신 정책은 혁신적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되든 노동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 공급측면 신우파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위한 작은 정부가 혁신. 공급측면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경제정책의 알파와 오메가
 - 최선의 경기부양 패키지는 영구적 감세, 특히 최고한계세율을 낮추는 부자 감세라고 주장
 -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에 사로잡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정책의 필요성 부정.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혁신정책은 시장을 교란하는 산업정책으로 매도
 - 국가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정부의 규제와 세금의 문제
- 혁신경제 신주류는 생산성 향상 혁신이 경제정책의 알파와 오메가. 경제의 양을 늘리는 경기부양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혁신촉진 경기부양 중시
 - 경기부양 패키지의 양만이 아니라 구성에 초점. 단기적인 소비자의 수요창출을 위한 패키지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구조개혁 경기부양
 - 혁신과정에서 시장실패가 상수이기 때문에 시장을 그대로 방치하면 기득권이 혁신의 맹아를 죽일 수 있음. 혁신친화적 생태계 조성과 혁신기업 지원 정책 필수
 -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을 연명시키는 보조금은 최대한 줄이고,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혁신 정책 필수

④ 무역 정책

- 수요측면 구좌파는 무역으로 인한 저임금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더욱 강력한 보편적 노동·환경 보호 추진
 - 노동자의 복지를 우선시.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을 야기하는 자유무역에 대해 회의적 태도
 - 특히 노동자에게 타격을 주는 저임금 국가, 노동·환경 기준이 낮은 국가와의 무역에 반대. 기존 자유무역협정 또한 더욱 엄격하게 수정하거나 자국통화 절하 정책 추진

- 공급측면 신우파는 할당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소비자 복지를 확대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
 - 국가의 비교우위를 교란, 할당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관세를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무역장벽에도 반대
 - 자유무역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에 초점. 해외의 저임금 생산으로부터 타격을 입는 노동자 또는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시장 왜곡,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하기 때문에 방임이 최선
- 혁신경제 신주류는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세계화와 자유무역 지지
 - 글로벌 무역으로 인한 경쟁 심화는 기업의 혁신 촉진, 세계화는 국제협력과 국제학습 촉진
 -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진화는 각국의 산업이 고부가가치 혁신 기반 재화와 서비스로 진화하는 새로운 글로벌 분업을 창출, 고임금 국가에게 자연스러운 혜택
 - 부당한 관세, 통화조작, 차별조치, 지적재산권 갈취 등, 공정한 무역질서를 파괴하는 이웃궁핍화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해 지원 필요
 - 혁신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일방적 보호무역주의를 막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필요
 - 효과적인 무역정책은 글로벌 경쟁의 도전에 대응하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국내 혁신정책과 동반되어야
 - 무역은 단순히 국가의 비교우위를 '노출'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우위를 '재창조'하는 혁신과 동반되어야

기본사회와 혁신경제

– 정치교체와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